

2012 행안부 주최 공직박람회 사회 예제문제 총평

※ 출제경향

법과정치	사회·문화	경제
8문제	6문제	6문제
•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특성 • 기본권의 성격 • 정치과정(투입과 산출) • 헌법개정, 법률개정 • 근대민법원칙의 수정 • 위법성 조각 사유 • 조약(한미 FTA)	• 기능론, 갈등론 • 사회문화 연구방법 • 사회조직 (공식적조직, 비 공식적조직, 자발적 결사체) • 문화의 개념 • 계층과 사회이동 • 사회복지	• 수요와 공급, 균형가격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 GDP, GNP • 공유재의 특징 (비재제성, 비경합성) • 환율 • 실업률

※ 출제특징

1.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2. 다만 공무원 시험의 성격상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상식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GDP, GNP, 환율, 실업률, 기본권, 대통령제, 헌법개정, 정당, 위법성조각사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3. 개념을 알고 간단히 응용할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다.
4. 개념간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5.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수능과목 3과목을 한 과목으로 출제하다 보니 알아야 할 내용은 많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을 투자해 고득점을 올리는 효율적 공부를 해야 한다.

1. 정답 ②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사회문화, 문화의 개념

	좁은 의미의 문화 (일상용어로서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학문적 의미로서 문화)
의미	• 정신적·물질적으로 세련되거나 더 발전된 상태를 뜻한다.	• 한 사회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뜻한다.
예	•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행사, 신문의 문화면, 문화계	• 한국문화, 미국문화, 이슬람문화, 동양문화, 청소년문화, 인디언 문화, 대중문화, 노인문화
평가적 의미	• 포함 ○ •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발전되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포함 × • 넓은 의미의 문화는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 ① (○) (가)의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상품권은 더 우수한, 발전한 문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 좁은 의미의 문화는 더 우수한 정신적·물질적 문화라는 의미이므로 기계와 같은 물질적 문화도 포함된다.
- ③ (○)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전승된다.
- ④ (○) (나)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 한 사회의 총체적 생활양식이다. 각 사회의 자연, 지리, 역사적 특성에 따라 생활양식은 정해짐으로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문화에는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좁은 의미의 문화는 발전되고 세련된 문화상태이므로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정답 ①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법과정치, 근대민법원칙 수정

※ 사적 자치 원칙은 근대 민법 원칙이다.

근대 민법 원칙	수정된 민법 원칙
• 사유재산권 존중원칙 (사유재산권 절대원칙) •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원칙 (헌법 제23조 2항) • 소유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므로 소유권은 상대적 권리이다. • 국가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가능 (예: 개발제한구역지정)

•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법률관계는 결정되어야 한다. • 국가의 계약에 대한 개입은 금지된다.	• 계약 공정의 원칙 •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된다.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과실 책임 원칙 • 개인이 타인에 끼친 손해에 대해 고의·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진다.	• 무과실 책임 원칙 (위험책임) •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운전자의 배상책임, 환경오염발생자의 배상책임)

3. **정답** ①**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법과정치, 헌법상 기본권

	자유권의 성격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성격	① 국가로부터의 자유 ② 국가에게 부작위를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③ 최근에는 적극적 권리 성격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④ 전국가적 권리, 자연법적 권리 ⑤ 인간의 권리	① 국가에게 작위를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 ② 급부청구권 ③ 국가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 ④ 실정법적 권리 ⑤ 국민의 권리	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② 국가에게 작위를 청구하는 권리 ③ 국가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	① 국가를 향한 권리 ② 국민의 권리 ③ 실정법적 권리
외국인의 주체성	① 대부분 외국인이 주체가 된다. ②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①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외국인 주체 (×) ② 환경권, 근로의 권리, 근로3권 : 외국인 주체 (○)	①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 외국인 (○) ② 국가배상 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상호주의하에서 인정	① 외국인, 참정권 주체 (×) ② 일정한 외국인, 법률상 지방의원선거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가짐

법인	①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주거의 자유 : × ②직업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 : ○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 ×	①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 ○ ②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	×
----	--	---------------------------------	---	---

- ① (○) 재판청구권은 다른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이다.
(예 : 재산권 침해시 재판청구)
- ② (×)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이다. 예를 들면,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면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이므로 간섭·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집회의 자유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이고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인 작위를 통해 실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 ③ (×) 자본주의발전에 따른 문제점은 빈부격차, 계급갈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하게 된다. 사회적 기본권을 통해 개인은 생존권을 확보해서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사생활 비밀의 자유, 재산권은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자유권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가에게 작위를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권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게 부작위를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4. 정답 ④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법과정치, 정치과정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을 구성한다. 국가기관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의 산출을 반영해 국민은 다음 선거때 국가기관(대표자)을 선출한다. 투입은 국민의 여론이나 선거로 표현되는데 국민의 지지 또는 요구이다. 산출은 국가의 법률제정, 정책의 시행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지지 또는 새로운 정책을 검토한다. 이를 환류(Feed back)이라 한다.

- ① (○) 선거를 통해 국민은 국가정책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므로 선거는 투입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 ② (○)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 되어야 국민이 국가정책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대표자인 국가기관은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 현대국가는 사회복지국가·행정국가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부제공을 위해 행정부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발전과 국가간의 의존성 심화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더욱 필요해지게 된 현대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라고 격하하는 표현이 있다. 법안을 행정부가 만들고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입법과정에서도 행정부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 ④ (×)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국가가 적극 반영하므로 투입이 중요하나 권위주의정부는 국민의 여론반영보다, 국가에 의한 의사결정인 산출을 강조한다.

민주정부	투입 > 산출 (Input) (Output)
권위적인 정부	투입 < 산출 (Input) (Output)

5. **정답** ③**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사회문화, 사회이동

	유형	특징	예
이동방향	수직 이동	계층적 위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변화	•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장사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
	수평 이동	동일한 계층 내에서의 사회적 위치 변화	• 상승이동 : 사원이 사장이 된 경우 • 하강이동 : 대기업 간부가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
이동범위 및 기간	세대간 이동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 변화	• 노동자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
	세대내 이동	개인의 일생 내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 변화	• 노동자에서 대기업 회장이 된 경우
이동원인 및 주체	개인적 이동	개인의 노력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위치 변화	• 노동자가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된 경우
	구조적 이동	사회변동으로 기존의 계층 구조에 변동이 일어난 결과 나타난 위치 변화	• 혁명, 전쟁과 같은 사회변동으로 기존 신분제도가 폐지된 경우.

- ① (○) 부모와 자녀의 계층이 동일하다면 세대간 이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르다면 세대간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표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계층비교를 통해 세대간 이동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부모계층 = 자녀계층	부모계층 ≠ 자녀계층
세대간 이동여부	×	○

- ② (○) 계층한 세습한 사람이 세대내 이동을 통해 계층이 변했다면 세대간 계층도 변했을 것이므로 세대간 이동에도 해당한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아들은 세대내 이동을 경험한 것이고 부모의 계층과 아들의 계층이 변화했으므로 세대간 이동도 발생한 것이다.

- ③ (×) 폐쇄적 계층구조하에서 신분·혈통에 따라 세대간 신분이 세습됨으로 원칙적으로 세대간 계층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한세대 내에서도 수직적인 계층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폐쇄적 계층구조에서는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 이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폐쇄적 계층구조	개방적 계층구조
의미	계층간의 수직이동이 금지된 계층구조	계층간의 수직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계층구조
예	• 인도 카스트제도 • 봉건제하에서 양반·노비와 같은 신분제도 • 노예제도	• 현대계급사회
수평이동	○	○
수직이동	• 원칙 : × • 예외 : ○	○
계층결정원인	신분·혈통	능력·노력

- ④ (○) 신분적 폐지는 세대간·세대·구조적 이동을 가져온다.

6. 정답 ②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법과정치, 사회이동,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의미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조직한 자발적인 정치 조직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공공 이익(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단체
목표	정권 획득	특수이익 실현	공공이익 실현
관심분야	모든 분야	특정 분야	다양한 분야
종류	• 새누리당 • 민주당	• 노동조합 • 약사·의사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환경단체 • 소비자단체

A : 정당 B : 시민단체 C : 이익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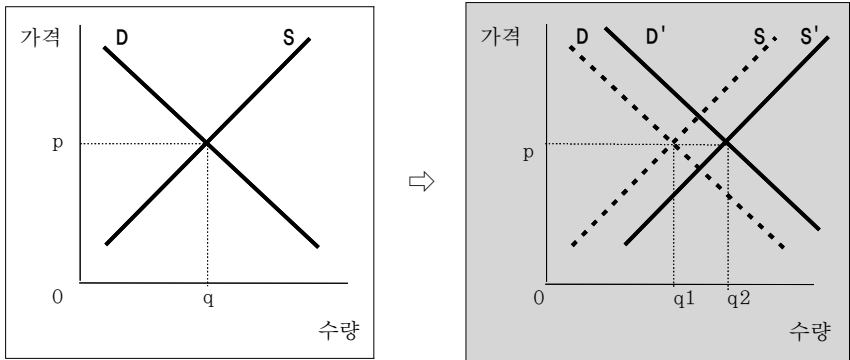
- ① (○)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한다. 시민단체는 후보를 공천할 수는 없다.
- ② (×) 정당은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익단체는 특정한 영역에 관심을 가진다.
- ③ (○)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모든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형성한다.
- ④ (○) 현대사회는 다원화, 전문화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정당은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집회·언론보도 로비활동 등을 통해 표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익집단은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7. **정답** ④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경제, 수요와 공급, 균형가격

- ④ (○) 수요증가는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의 요인이며, 공급증가는 가격 하락과 거래량 증가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A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게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씩 증가하였다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과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상쇄되어 균형가격은 불변이다.

P : 균형가격, q : 균형거래량

변동내용		
수요 : 증가 공급 : 증가		
	변동결과	P 불변 q 증가

8. 정답 ④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사회문화, 사회복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의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취약계층의 자립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지원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자	장애인, 노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자.
비용부담	국가, 사용자, 수급자가 분담	국가가 예산에서 전액 부담	국가 부담
지원내용	보험금 지급	급여 지급	취업교육, 일자리 제공, 시설이용, 비경제 지원 중심
가입	강제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
종류	4대 사회 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등) • 의료보호제도 • 기초노령연금제도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아동복지 • 여성복지
효과	상호부조	소득 재분배 효과	경제적 자활
소득재분배 효과	있다	크다	조금 있다
장점	• 능력별 부담 • 근로의욕 고취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자도 구제 받을수 있다.	취약 계층의 자립
단점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자 보호(×)	• 국가재정부담 • 근로의욕 저하	• 생활보장효과 불확실 • 소득재분배 효과 적다

(가) 사회보험 (나) 공공부조 (다) 사회복지서비스

- ① (×)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일정한 자격요건(18세 이상 ~ 60세 이하 소득이 있는 자 등)을 충족하면 가입이 강제된다. 따라서 (가)는 가입이 강제되므로,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틀리다.
- ② (×) 보편적 복지가념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초기 자본주의시대에서는 빈민구제에 복지제도의 목적이 있었으나 후기 자본주의시대에서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가념이 자리잡았다. 보편적 복지가념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인데 반해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자가 그 대상이므로 보편적 복지가념을 실현하는 제도로 보기 힘들다.
- ③ (×) 공공부조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익을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 ④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2년 기준으로 1인 노인의 경우 78만원 이하 소득인 자가 그 대상자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자기 부담 없이 국가가 예산에서 전액지원해 주는 제도이므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와 비용부담방식이 동일하다.

9. 정답 ②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법과정치, 조약, 한미 FTA

한미 FTA는 한국·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3월 15일 시행되었다.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① (×) 한미 FTA의 체결비준권은 헌법 제73조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다.
 ② (○) 한미 FTA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 한미 FTA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 비준된 조약이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 비준된 조약	법률의 효력
국회의 동의없이 체결된 조약	명령의 효력

- ④ (×) 헌법 제53조 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령이나 조약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날 효력을 가진다. 이번 한미 FTA는 조약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해서 발효일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한·미 양국이 문제에 나오듯이 2012년 3월 15일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효력이 20일 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월 15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0. 정답 ④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경제, 탄력성

- ① (×) 10%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판매 수입이 10% 감소했다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매수입 증가분보다 수요량 감소로 인한 판매 수입 감소가 더 큰 것으로 A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완전탄력적 ×)이다. 그러나 완전탄력적이라는 것은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틀린 지문이다.
- ②, ③ (×) 10%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B재의 매출액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격상승률만큼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재화로 단위탄력적이다.
- ④ (○) C재의 경우,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판매 수입도 10% 증가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완전비탄력적인 재화이다.

구분	A재	B재	C재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가격 변동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량이 변하는 민감도 →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1% 변동할 때 수요량이 몇 % 변동하는가를 나타냄.
판매 수입 증감률 (%)	-10	0	10	
수요의 가격탄력성	> 1 (탄력적)	1 (단위 탄력적)	0 (완전 비탄력적)	$\text{수요의 가격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동률}(\%)}{\text{가격의 변동률}(\%)}$ $= \frac{\text{수요량의 변동분} / \text{원래의수요량}}{\text{가격의 변동분} / \text{원래의가격}}$

11. 정답 ④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법과정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특성

대통령제 : 국민, 의회와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 → B는 대통령제이다.
 의원내각제 : 국민, 의회만 선거로 선출 → A는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선거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 민주적 정당성 이원화	국회의원선거 → 민주적 정당성 일원화
국가원수	대통령	대통령 또는 군주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
행정부수반	대통령	수상
내각구성	대통령 임명	의회에서 수상선출 → 내각구성

국회의 내각(정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	×	○ → 내각불신임
의회해산제	×	○
국회의 내각에 대한 법적책임 추궁	○ 탄핵제도	○ 탄핵제도
권력분립	엄격한 분립	공화와 협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
의원과 각료겸임	×	○
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	×	○
집행부회의	자문기관	의결기관(내각회의)

- ① (×) 사법권의 독립은 법치주의국가에서 필수적인 제도이다. 현대에 와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모두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공통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다.
- ② (×) 의원의 각료 겸직은 의원내각제의 특성이다.
- ③ (×) 대통령제에는 의회해산제가 없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 ④ (○)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12. 정답 ②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사회문화, 사회조직

	공식 조직	비공식적 조직
의미	•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직	• 공식조직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지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조직
예	• 학교, 회사	• 학교내 동아리 → 공식 조직내 비공식적 조직을 구성원의 만족감과 사기를 높여 공식 조직의 과업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관계	목적에 위한 수단, 형식적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

	비공식적 조직	자발적 결사체
개념	공식적 조직내에서 구성원들이 개인적 관심을 위해 만든 조직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 단체
가입자격	• 공식적 조직 구성원일 것 •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	• 가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예	• 학교동아리 • 회사 내 산악회	• 변호사회(직업집단) : 특정이익증진 • 환경단체 : 사회문제해결 • 산악회(친목집단)
변호사회	×	○
시민단체	×	○

- ① (○) 기업은 공식조직이고 기업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다.
- ② (×) 비공식적 조직은 공식적 조직의 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발적 결사체와는 달리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
- ③ (○) 공식적 조직은 비인격적·형식적 관계이다 보니 인간소외를 낳는다. 공식적 조직내 비공식적 조직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하므로 인간소외를 할 수 있다.
- ④ (○) 기업과 같은 공식적 조직은 인간관계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므로, 구성원은 형식적, 비인격적 관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비공식적 조직은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기능을 한다.

13. 정답 ②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사회문화, 기능론, 갈등론

	기능론	갈등론
사회에 대한 인식	•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	• 사회는 희소가치를 둘러싼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대립 관계의 장
사회 구성요소	• 사회구성요소는 상호의존적임 • 또한 사회의 유지·존속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함	• 사회의 구성요소들은 대립·갈등관계임 • 갈등은 보편적 현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역할배분	• 사회구성원간에 합의·계약에 의해 배분됨	•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에 의해 배분됨
이론적 중점	• 사회를 현상대로 유지하려는 데 중점 → 보수적, 현상 유지적	• 현 사회를 변화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데 중점 → 진보적, 현상 타파적

법과 규범	•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 → 반드시 준수	• 사회적 강자에 의해 강요된 것 → 법 개정
주요개념	• 안정성·균형성 • 조화·균형, 항상성 • 통합·질서	• 갈등 • 사회변동과 변화
비판	• 기득권 유지, 사회변화억압 •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움	• 사회의 존속과 통합경시 • 사회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역할배분 무시

- ① (○) 기능론은 사회변동이 산회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
- ② (×) 사회는 본질적으로 변동을 향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갈등론이다.
- ③ (○) 기능론은 유기체가 그러하듯이 사회도 외부환경에 대응해 원래의 상태로 균형을 찾아가는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 ④ (○) 갈등론은 사회문제가 사회변동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기능론은 사회문제는 병으로 유기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듯이, 사회의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이런 사회문제는 사회내부적으로 해결해 다시 원래 균형상태를 회복한다고 한다.

14. **정답** ①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사회문화, 사회문화연구방법

	실증적 연구방법 (양적 연구방법)	해석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전제	• 사회현상 = 자연현상 → 방법일원론	• 사회현상 ≠ 자연현상 → 방법이원론
목적	•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발견	• 사회·문화현상의 의미해석과 이해
연구방법	• 양적접근 : 자료의 계량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자료분석, 개념의 조작적 정의 (경제성장을 GNP로 측정) • 주로 연역적 탐구 • 공식적인 자료중시 • 표본 조사 연구법, 실험 연구법, 수량적 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법	• 질적 접근 :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 감정이입을 통한 사회·문화현상이해 • 인간행위 직접 관찰 • 비공식적인 문서, 일기 • 공식적인 분석의 이면적 의미 • 사례조사연구법 • 문헌연구법
장점	• 사회현상에 대한 보편적 법칙발견 • 객관적 연구가능	• 행위자의 주관적 의식의 심층적 이해 가능

단점	•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내면이나 가치관 등 주관적인 영역연구가 어렵다 •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의지의결과 인간의 동기, 의도·가치로부터 분리해서 연구한다 • 인간행위의 내면적 동기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어렵다.	•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원칙도출이 어렵다는 점 •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개입으로 연구의 객관성 상실할 우려가 높다 • 정확하고 엄밀한 결과 도출이 어렵다
기출분석	• 제3자의 입장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에 의해 보편 타당한 법칙 발견을 추구 한다 • 학교당 평균장서, 학생 1인당 월평균 도서관이용실적 분석 •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하고 있다 • 사회·문화 현상의 인과 관계를 밝히 고자 한다 • 사형제도 찬반론에 대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통계분석 • 현상에 대한 설명 • 사회현상 예측가능 • 프로야구 팬클럽 회원의 충성도 연구 (수능12년)	• 여성결혼 이민자 등의 문화차이와 갈등이해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상황 정의를 중시 한다 • 연구 대상자가 구성해 내는 생활 세계가 연구의 초점이다 • 계량화하기 어려운 문제의 연구에 적합하다 •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며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사형제도에 대한 사형수의 면담을 통해 연구 •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이해 중시 • 현상에 대한 이해

- ① (○) 실증적 연구방법은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가치를 배제하고 통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실증적 연구방법은 가치와 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해석학적 접근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여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 ② (×) 실증적 연구방법은 가치를 배제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하여 자연현상의 연구방법과 사회문화현상의 연구방법을 일원적으로 파악한다.
- ③ (×) 실증적 연구방법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 방법일원론을 주장한다.
- ④ (×) 연구대상자의 심층적 이해를 강조하는 연구방법은 해석학적 연구방법이다.

15. 정답 ④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경제, GDP, GNP

	※ $GNP = GDP + \text{해외 수취 요소 소득} - \text{해외 지급 요소 소득}$ $= GDP + \text{해외 순수취 요소 소득}$ ※ A = 내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B = 내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C =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	--

① (×)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만 갑국의 물가 상승률은 알 수 없다.

	구분	2010년	2011년
② (×)	GDP 증가율	$(10/100) \times 100 = 10$	$(10/110) \times 100 = 9.09$

③ (×) 해외 순수취 요소 소득 = $GNP - GDP$ 이므로 $(GNP - GDP)$ 의 차이는 결국 우리 국민의 해외 소득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뺀 값이다. 2009년은 $(GNP - GDP)$ 의 차이가 0, 2010년은 $(GNP - GDP)$ 의 차이가 -10, 2011년에는 $(GNP - GDP)$ 의 차이가 -20이다. 즉, 갑국 국민의 해외 수취요소 소득이 증가하였거나, 갑국에서 일한 외국인에게 지급한 해외 지급 요소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④ (○)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갑국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GDP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1. 국내 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최종재)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

2. 국민 총생산(GNP : Gross National Product)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최종재)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

3. 국내 총생산(GDP)과 국민 총생산(GNP)의 관계

16. 정답 ③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법과정치, 헌법개정, 법률개정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 (×) 국회개정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128조)
- ㉡ (×) 국회의 헌법 개정 의결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이상이다.(헌법 제130조 제1항)
- ㉢ (○) 헌법 제130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 법률 제정·개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도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51조)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 제1항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51조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17. 정답 ②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경제, 공유재의 특징, 비배제성, 비경합성

구분		배제성	
		유	무
경합성	유	A = 시장재	B = 공유재
	무	C = 요금재	D = 공공재

배제성이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의 재화이용을 금지 시키는 특성을 말하며, 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특성을 말한다.

- ① (×) 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갖는 재화는 시장재이다. 시장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용이한 재화이다.
- ② (○)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갖는 재화는 공유재이다. 공유재는 공유재의 비극(common tragedy)이라고 표현되듯이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발생과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③ (×)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B재(공유재)이다. C재는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가 가능한 요금재이다.
- ④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갖는 D재는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더 크다.

18. **정답** ③**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법과정치, 위법성 조각 사유**

- 범죄구성요건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사람을 살해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 위법성 : 어떤 행위가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형집행인이 사형집행명령을 받고 사형집행을 했다고 하자. 그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형집행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사형집행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게 된다.
- 위법성조각사유 : 어떤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성립이 부전된다. 어떤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게 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다음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방위	① 의의 :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례 •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살해하려하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여 중상을 입힌 경우 •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강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 불량배에게 각목으로 구타당하고 있는 친구를 구하려고 불량배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	① 의의 :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례 :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행위
긴급피난	① 의의 :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행위의 일종이다. ② 사례 •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에 뛰어드는 버스를 피하려다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갑자기 쏟아진 폭우와 번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근처에 있는 가정집으로 뛰어든 경우 • 길을 지나가는데 멧돼지가 공격해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한 나머지 주인의 허락 없이 이웃집에 들어간 경우 • 목욕 중 화재가 발생하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2층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를 부딪히게 파손한 경우

자구에 의한 행위	① 의의 :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국가기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여는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채무자를 채권자가 체포하는 경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아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얼마 전에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절도범을 발견하고 폭력으로 물건을 빼앗은 경우 •수일 전 자신의 지갑을 훔쳐간 소매치기를 잡아 지갑을 되찾은 경우
피해자의 승낙	① 의의 : 법익의 주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승낙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생명은 승낙이 되지 않는다. 승낙을 받아 살인을 한 경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된다. ② 사례 •의사가 치료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했는데 사망한 경우

- ① (×) A는 광견병 걸린 개에 의한 자신의 신체·생명권을 위협을 받고 있자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간 사례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② (×) A는 긴급피난, B는 정당방위로써 A·B 모두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 책임능력 :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한다. 책임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을 그 요소로 하며,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도 없다.
 - 책임능력조각사유 :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 심신상실자는 형사책임이 면제 된다.
- ③ (○) A·B행위는 모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성립이 부정되는 경우이다.
- ④ (×) B의 행위는 자신을 때리려는 자에 의해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당할 상황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19. **정답** ②**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경제, 환율

※ 환율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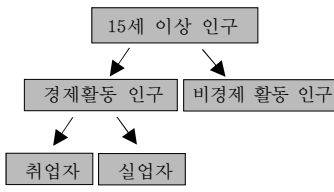
환율의 상승(원화 가치 하락)	환율의 하락(원화 가치 상승)
· 수출 :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하락 → 수출 증가 · 수입 :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상승 → 수입 감소 · 물가상승 : 수입품 가격 상승, 원자재의 국내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 외채 상환 부담 증가 : 외채의 원화 표시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외채 부담을 증가시킴. · 통화량 증가 · 해외여행 경비의 증가	· 수출 :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상승 → 수출 감소 · 수입 :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 → 수입 증가 · 물가하락 : 수입품 가격 하락, 원자재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물가하락 · 외채 상환 부담 감소 : 외채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외채 상환 부담을 감소시킴. · 통화량 감소 · 해외여행 경비의 감소

제시된 표에 따르면,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하락(환율상승)하고 있으며,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상승(환율상승)하고 있다.

- ① (×)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엔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즉, 외채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외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므로 상황을 서둘러야 한다.
- ② (○) 엔화 대비 환율이 상승하므로 5월 이후에는 해외(일본) 여행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여행을 앞당겨서 다녀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③ (×)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국내 가격은 5월 이후 더욱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대금 결제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④ (×)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20. 정답 ①

해설  출제 영역 및 유형 : 경제, 실업률

① 경제활동 참가율(%) = $\frac{\text{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② 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③ 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pre> graph TD A[15세 이상 인구] --> B[경제활동 인구] A --> C[비경제 활동 인구] B --> D[취업자] B --> E[실업자] </pre>
---	---

- ① (○) 2010년 실업률 = $\frac{32}{80} = 0.4(40\%)$, 2011년 실업률 = $\frac{28}{70} = 0.4(40\%)$ 로 실업률은 불변이다.
- ② (×) 2010년 고용률 = $\frac{48}{100} = 0.48(48\%)$, 2011년 = $\frac{42}{100} = 0.42(42\%)$ 로 고용률은 감소하였다.
- ③ (×)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것으로 80%에서 70%로 감소하였다(노동 가능 인구 불변 가정).
- ④ (×) 노동 가능 인구를 불변으로 가정하였으며, 취업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취업자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